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

▶ 일 시 | 2020년 1월 17일(금) 14: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F)

▶ 주 최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대연합, 전군구국 동지회연합 소속 13개단체, Great Korea

▶ 후 원 |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 신의한수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국민의례	
14:05~14:15	【개회사】	이 석 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운영위원장)
		조 동 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명예교수)
◆ 좌 장: 송 대 성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장)		
14:15~14:30	【발제 1】	북핵 위협의 현주소 신 원 식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미래위원장)
14:30~14:45	【발제 2】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한 회고와 반성 조 갑 제 (조갑제TV 대표)
14:45~15:00	【발제 3】	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 김 태 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
15:00~15:15	【발제 4】	탈원전이 국정 문란인 이유 이 병 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15:15~15:35	3분 스피치 및 구호제창 (공동주최 대표)	
15:35~15:40	【영상 상영】	박정희 대통령 핵개발의 꿈 그리고 40년 후 김 형 철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유튜브 장군의소리 대표)
15:40~15:50	대국민 결의문(안) 채택 신원식, 조갑제, 김태우, 이병령 외	
15:50~16:00	대국민 결의문(안) 영어 낭독 김 동 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제홍보팀장)	
16:00~16:10	폐 회	

[목 차]

개 회 사

- 이 석 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운영위원장) ----- 7
- 조 동 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명예교수) ----- 9

발 제

- 북핵 위협의 현주소
신 원 식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 / 미래위원장) ----- 13
-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한 회고와 반성
조 갑 제 (조갑제TV 대표) ----- 31
- 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
김 태 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43
- 탈원전이 국정문란인 이유
이 병 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57

대국민 결의문

- 핵무장과 탈원전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 결의문(안)
신원식, 조갑제, 김태우, 이병령 등 ----- 65
- 핵무장과 탈원전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 결의문(안) 영문
김동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제홍보팀장) ----- 67

개 회 사



이 석 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운영위원장

오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대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 13개 단체」 및 「Great Korea」 회원분들을 모시고 핵무장 축구와 탈원전정책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그리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경자년을 맞이하면서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의 신년사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25일 김정은 지휘 하에 창린도 해안포사격을 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바와 다름이 없으며, 지난 연말 4일간 실시한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비핵화의 뜻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 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새해 들어서 북한으로부터 그렇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일방적인 구애를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한 것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동맹인 미국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협력할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북한에 직접 또는 유엔을 통해 경고하고 요구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하고 미래세대 먹거리가 될 한국형 원전을 폐기하려는 대통령이 우리의 참다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승화 시킬 수 있다면 정부에게는 강력한 압력으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는 정당에게는 정당정책으로 채택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는데 가장 애써주신 대수장 전략위원이시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신 김태우 박사와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님, 그리고 발제해주실 조갑제 대표님, 신원식 장군님,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님, 3분 스피치하실 분들, 영상준비에 수고해주신 유튜브 「장군의소리」 대표 김형철 장군님, 대국민 결의문을 낭독하는 김동연 기자, 끝으로 사회를 맡아주신 송대성 대수장 전략위원장님께 존경의 경례를 드리며, 참석해주신 대수장 회원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 올립니다.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7.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운영위원장 이석복

개 회 사



조 동 군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

명지대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등 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자위적 핵무장 축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군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 중 안보는 ‘대한민국 존립’의 기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것도 외교와 안보가 ‘누란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6일에 독일에서 행해진 ‘괴르버 선언’이 잘못 끼여진 첫 번째 단추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1차적으로 괴르버 선언에 의해 해체되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리는 선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합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괴르버 선언은 헌법 4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정책되면 남북 간 합의에 의해 통일이 이뤄진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괴르버 발언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화가 정책되면”은 말 그대로 가정법입니다.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고수하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정착된다는 말 입니까. 역사상 통일은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 정치변동’입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가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통일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분법’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악(惡)이고 평화는 선(善)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통일을 의미합니까.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 민족지상주의 미몽(迷夢)에 빠지는 것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의 주술(呪術)과 평화의 환상’을 혁파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중국몽(夢)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라고 발언

했습니다. 국력(國力)과 국격(國格)은 층위가 다릅니다. 설령 국력이 모자라도 국격을 내려놓아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UN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은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CVID)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가벼운 말(cheap talk)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2019년 4. 11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 방명록에 “누구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위대한 한·미 동맹이 함께 갑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위대한 남·북협력이 함께 갑니다”로 유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big deal을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good enough deal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않았음에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불협화음과 불신만 증폭시켰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해석 차이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불렀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해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선언했고 급기야는 ‘지소미아 파기’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중재자 외교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어내는 ‘벼랑 끝 전술’이 아닌 자승자박의 ‘셀프 벼랑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교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적(敵)에 대한 순진한 포용정책이나 희망적인 사고는 어리석은 것이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탕진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반열에 오른 레이건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일갈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유화정책에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순진한 진보주의자들이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포용정책은 유화정책에 불과하고 유화정책은 전쟁과 평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항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자유의 전사’(freedom fighter)가 있었기에 오늘날 미국이 최강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판을 다시 짜고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경제학에 ‘동등무기 원칙’(equal footing)이 있습니다. 노사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간에도 동등무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위적 방어적 핵무장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미래의 먹거리로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권이 백년대계인 원전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됩니다. 원전 폐기를 하려면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의 총의를 물어야 합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사말을 맺으려 합니다. “위험보다 치욕을 택하는 나라는 지배당할 마음을 갖고 있으며, 지배당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배당하려 합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데, 국민자산인 탱크저지 구조물을 해체하고 전방 초소(GP)를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권은 짧고 정치는 길니다.//

2020. 1. 17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명예교수 조 동 근

<핵무장 국민결의대회>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발제 1

북핵 위협의 현주소

■ 신 원 식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 / 미래위원장

‘북핵 위협의 현주소’ 요약

북(北)의 핵무장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북 비핵화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멀어져 가고 있다. 직접적인 북핵 위협에 놓인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해 변변한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귀한 시간만 낭비했다. 북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핵 없는 한국을 굴복시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북 비핵화는 그동안 실패의 교훈을 실천하면 간단하나, 한·미의 정치 환경 때문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것이 문제다.

핵 능력은 핵탄두와 운반체계 결합인 핵무기의 질과 양으로 볼 수 있다. 북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제3세대 핵무기인 수소폭탄 제조기술을 확보했다. 핵물질을 토대로 한 핵탄두의 양을 추정해 보면 최대 60여 발이고 매년 10개 내외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 정확한 핵탄두의 양은 핵물질 이용률 등 제조 기술과 농축우라늄 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은 2000년대까지 사거리 1,000km 내인 스커드 계열, 1,300km인 노동, 3,500km인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 배치했다. 2017년에는 화성-12형과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화성-14형(7~8,000km)과 15형 미사일(13,000km)을, 2019년에는 SLBM(북극성 3형, 2,000km)과 다양한 형태의 고기동 정밀 전술 유도무기 발사에 성공했다. 북 미사일 기술을 평가해보면 첫째, ‘장사정’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정확성’은 항법 체계와 그리드 핀은 완료했으나, 탄두부 정밀유도와 재진입 기술은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즉응성’은 북극성 계열과 KN-23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취약하다. 향후 SLBM 기술을 토대로 지대지 미사일(SRBM, MRBM, IRBM, ICBM)도 고체연료로 개량해 나가고 액체연료 미사일은 전투 예비, 무력시위, 교육훈련, 대외판매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북이 공개한 잠수함은 1990년대 초 폐기한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한 3,000톤급으로 앞으로 북극성-3형 3발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SLBM과 ICBM의 결합이 완성되면 한·미 동맹은 결정적 위협에 빠질 수 있다.

이제 북핵 관련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첫째, 북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2017년 12월金正은이 선언한 ‘핵 무력 완성’은 북핵 협상의 주제가 사실상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 또는 군축으로 변했다는 뜻이다. 셋째, 따라서 실질적인 북핵 대비태세 구축을 국가 최우선 과업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동맹과 자강(自強)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핵을 억제하되, 억제가 실패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것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The North's Nuclear Weapons & the South's Nuclear Nightmares]

Won-sik Shin

Lt. General(Ret.)/Chairman, Future Vision Committee,
Strategic Planner, Korean Retired Generals & Admirals Defending the Nation (KORGAD)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has now crossed the line of 'no return' and even the feeble hop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Pyongyang is fading away. But, South Korea has relied only on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by the alliance, failing to come up with any independent measures against the asymmetric threat.

Pyongyang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is to dissolve the ROK-U.S. alliance and to use it as a leverage bringing the U.S. to the negotiation table. Pyongyang wants to terrify the nukeless-Seoul into submission, and eventually communize the whole peninsula. Denuclearizing the North may be easy if we practice lessons we have taken from the past failures. But politics in Seoul and Washington makes it difficult.

Nuclear capability is the quality and quantity of nuclear weapons consisting of nuclear warheads and delivery vehicles. Through 6 nuclear tests, Pyongyang has acquired both fission and fusion bombs. Now it may have up to 60 nuclear warheads with capabilities to produce 10 nuclear warheads annually.

By the 2000s, Pyongyang deployed 1,000km reachable Scud missiles, 1,300km reachable No-dong missiles and Musudan missiles with the range of 3,500km. In 2017, it successfully launched Hwasong-12, Hwasong-14 (7~8000km), Hwasong-15 (13,000km) which can be a direct threat to the Continental US (CONUS). In 2019, Pyongyang developed and test-launched SLBM (Pukoksong-3, 2,000km) as well as many other high-mobility precision guided weapons. By all accounts, the North seems to have achieved long-range capability and accuracy while not yet to attaining reentry technology and warhead precision guidance. Responsiveness of the North's missiles seems problematic since most missiles rely on liquid fuel except a couple of solid-fuel missiles like Pukkuksong and KN-23 missiles. Pyongyang will continue to switch to solid fuel for future surface-to-surface missiles while liquid-fuel missiles will be reserved or used for show of force, education, military exercises, exports, etc.

In July of 2019, North Korea disclosed the 3,000-tonnage submarine which seemed to be re-engineered Golf-class submarine made by the former Soviet Union. It is likely to be used as

the platform for Pukkuksong-3 SLBMs. If North Korea deploy inter-continental SLBMs, it can be a critical threat to the ROK-US alliance.

Now, we must accept three ‘inconvenient truth’ abou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hurry to come up with realistic countermeasures. First, the North will never throw away its nuclear arsenal. Second, the agenda in the negotiation over the North's nuclear matters has changed from how to fully denuclearize the North to how to reduce or freeze its nuclear weapons since December 2017 when Kim Jong Un announced “completion of nuclear deterrence.” Third, therefore, we must come up with realistic deterrence against the nuclear threats. South Korea should deter the Pyongyang's nuclear threat through both self-reliant and alliance capabilities. It should also possess capabilities to deal with the situation even if deterrence fails.

북핵 위협의 현주소

신 원 식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 / 미래위원장

겨울이 오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미래 위원장 겸 전략위원인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첫 발제자로서 북핵 위협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뒤 발제자들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북핵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핵심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北)의 핵무장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북 비핵화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핵 개발을 추진하던 북은 냉전 해체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이 되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장의 길로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제네바 합의(1994), 9·19 공동성명(2005) 등 북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넘친 적도 간간이 있었지만 27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직접적인 북핵 위협에 놓인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해 변변한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귀한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여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베짖이의 행복은 비극적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성큼 다가온 온 탓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족 공조를 앞세워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전통적 동맹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한국군 자체의 북핵 대응능력은 전무(全無)한 데 유일한 해법인 한·미 동맹마저 벼랑 끝에 섰습니다. 베짖이는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요.

북(北)이 핵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생존은 모든 유기체의 최상위 가치기 때문에 북은 모든 것을 여기에 걸고 있습니다. 북의 입장에서 생존은 남·북 공존이 아닌 한반도 적화(赤化)입니다. 부강한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적화를 위해선 한·미동맹이 걸림돌입니다. 한마디로 북은 미국과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한국과는 1대 1로 싸우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입니다. 북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핵 없는 한국을 굴복시켜 적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이를 굳세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北) 비핵화는 왜 실패했는가?

북 비핵화가 실패한 것은 첫째, 북의 핵 개발 동기와 핵 포기 대가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존, 즉 안보적 이유로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은 성공했으나 그렇지 않은 아르헨티나·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포기했습니다. 북은 핵 개발을 시도한 그 어떤 나라보다 동기가 강력하기에 경제적 지원이나 생존에 지장이 없는 제제에 핵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둘째 북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북은 옛 소련으로부터 입수한 기술을 기초로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핵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핵 개발이라는 ‘대동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남·북 모두 우수한 DMA를 공유한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셋째 핵 개발 동기가 강력할수록 협상과 제제는 양립(兩立)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제제가 선행돼야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북이 불편하더라도 생존에 지장이 없는데 생명 같은 핵을 내려놓을 리가 만무합니다.

넷째 초기 유엔 대북제재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의 대외무역을 불법과 합법으로 구분하고 불법거래 즉, 무기거래만 금지하는 선별 제재였습니다. 북의 대외통상에서 무기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고 증거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의 2321호부터 2017년에 나온 2371호, 2375호, 2397호는 합법·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통제하는 포괄 제재로 바뀌었습니다. 비로소 북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제제 회피와 완화대책, 중국의 소극적인 참여로 현재 북은 어렵긴 해도 생존이 위태로운 처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북(北) 비핵화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 비핵화는 해법이 없는 게 아니라 한·미의 정치적 환경 때문에 해법을 실천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북 비핵화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를 실천하면 됩니다. 핵이 ‘생존의 보검(寶劍)’이 아니라 ‘죽음의 독배(毒杯)’라고 느낄 때 김정은은 ‘비핵화를 향한 전략적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대북(對北) 경제제재가 완전한 경제봉쇄로 강화되고 이를 버티더라도 결국 미국의 군사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핵은 김정은에게 ‘죽음의 독배’가 됩니다. ‘핵과 함께 생존과 적화(赤化)’라는 최선택 대신, ‘핵 없는 생존’이라라는 차선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 옵션입니다. 세계 최대 통상국가인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각오하고 군사 개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김정은 역시 파멸을 각오하고 군사적 대응을 하기는 힘듭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핵 능력이란?

핵 능력은 핵탄두와 운반체계 결합인 핵무기의 질과 양으로 볼 수 있다. 핵탄두는 핵 물질(Pu, HEU)과 기폭장치를 결합하여 핵폭발 장치를 만든 후 이를 소형화해 운반체계에 탑재하면 완성됨

니다. 핵탄두의 질은 기술진보에 따라 4세대로 구분합니다. 제1세대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것과 같은 핵분열탄으로서 폭발력은 통상 10~500kt 수준입니다. 제2세대 증폭 핵분열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 소량의 핵융합 불질을 주입하여 핵분열 탄보다 2~5배 폭발력을 증대시킨 것입니다. 제3세대 수소폭탄은 태양에너지 원리인 핵융합을 이용하여 폭발력을 극대화한 것으로 통상 MT급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세대 특수기능 핵무기로써 생명체만 살상하는 중성자탄, 전기 전자 기능만 마비시키는 핵 EMP 탄 등이 있습니다.

운반체계는 크게 미사일과 전략폭격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항공기에서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운반체계는 미사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북(北)이 보유한 핵탄두의 질(質)과 양(量)

북은 195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핵심기술과 핵물질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제3세대 핵무기인 수소폭탄 제조 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 핵실험 경과〉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06.10.9	'09.5.25	'13.2.12	'16.1.6	'16.9.9	'17.9.3
진도 /위력	3.9Mb /0.8kt	4.5Mb /3~4kt	4.9Mb /6~7kt	4.8Mb /6kt	5.0Mb /10kt	5.7~6.3Mb 108~120kt

북이 보유한 핵물질을 토대로 핵탄두의 양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북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양은 Pu 40~60kg, HEU 200~500kg 정도입니다. 핵탄두 1개 제조에 Pu 2~6kg, HEU 15~20kg이 든다고 계산할 때, 북이 보유한 핵탄두는 최대 60여 발이 됩니다. 앞으로 북이 매년 Pu 6kg, HEU 40~80kg을 확보한다면 연간 10개 내외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핵탄두의 양은 제조기술, 핵물질 이용률, 은닉된 농축우라늄 시설의 수와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北) 미사일 능력의 오늘과 내일

북은 1980년대부터 사거리 300km인 스커드 B와 사거리 500km인 스커드 C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거리 1,000km인 스커드 ER과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2000년대에는 사거리 3,500km인 중거리 미사일(무수단)까지 배치했습니다. 2016년에는 ICBM 개발에 필요한 핵탄두 소형화, 대용량 신형 엔진 개발에 이어 2017년에는 화성-12형과 미 본토를 직접 공격

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에는 SLBM(북극성 3형)과 다양한 형태의 고기동 정밀 전술 유도무기를 성공리에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의 3대 요소인 ‘장사정, 정확성, 즉응성’ 측면에서 북 미사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요한 사거리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장사정’ 측면은 성공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화성-14형의 경우 탄두 중량을 500kg 가정했을 때 사거리는 7,000~8,000

km로 추정되고 200~300kg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사거리는 10,000km로 시카고나 뉴욕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13,000km로 추정되는 화성-15형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초대형 핵탄두를 장착,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미사일로 화성-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제원과 특성이 훨씬 우월하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이뤘다’라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김정은이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공개한 고강력 섬유와 탄소 복합재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강력 섬유를 사용하면 동체 무게를 30%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미사일 사거리나 탄두 무게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확성’ 측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법 체계와 상승 자세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그리드 편은 완료했으나, 대기권 진입 전·후 필요한 탄두부 정밀유도와 충격과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진입 기술은 아직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아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기술 진전은 이룬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90년대 초 러시아 전문가들이 미사일 재진입을 위한 내열성 및 내마모성 소재에 관련된 기술지원을 위해 북을 극비로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화성-14형을 발사 후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ICBM 전투부 첨두의 열 견딜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을 최종 입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수천 도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조건에서도 탄두 내부 온도가 20~45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장치는 정상 동작했다.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비행해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라고 밝힌 점입니다.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북이 40~50km 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켜 핵 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6,000~7,000°C보다 훨씬 낮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의 재진입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도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사일을 실제 군사적으로 운용할 때 신속성과 융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즉응성’ 측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 미사일은 북극성 계열과 2019년 시험 발사한 KN-23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응성 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옛 소련의 R-27(SS-N-6)을 역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SLBM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은 2016년 8월 사거리 500km (정상 발사, 사거리 1,250km 이상)의 북극성 1형에 이어, 2017년 2월 이를 지상 발사용으로 개조한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최대 고도 910여km, 비행거리 450km(정상 발사, 사거리 1,900~2,000km)의 북극성 3형 시험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북극성 3형은 직경 1.1m인 북극성 1형에 비해 1.4m 이상 커졌고 탄두가 뭉뚱한 것으로 볼 때 다탄두(MRV) 탑재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은 SLBM 기술을 바탕으로 지대지 미사일(SRBM, MRBM, IRBM, ICBM)도 고체연료로 점차 개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은 전투 예비, 무력시위, 교육훈련, 대외판매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北), SLBM 탑재 대형 잠수함 개발도 계속

북은 1990년대 중반에 러시아로부터 3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철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도입해 북극성 1형을 발사한 신포급 잠수함(길이 67m, 폭 6.6, 수중기준 배수량 2,000톤)을 역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 북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1990년대 초 폐기한 옛 소련의 구형 골프급 SLBM 잠수함을 개조한 3,000톤급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3발의 북극성-3형 SLBM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SLBM과 이를 탑재한 대형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 한·미 연합작전은 물론 한·미 동맹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Kill Chain과 미사일 방어 작전이 곤란해지고 관련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북이 신뢰성 있는 제2격력(Second strike capability)과 최소억제전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의 대한(對韓)방위 공약 의지는 약해지고, 북의 대미(對美) 협상력은 증대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SLBM과 ICBM이 합쳐진 핵 능력이 한·미 동맹을 결정적 위기로 몰고 가지 않도록 양국의 진지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북(北), 정찰위성 개발도 병행

북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포함해 그동안 총 6회의 위성용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의 위성발사체입니다. 이는 10,000km급 ICBM 로켓의 성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단 페어링과 2단 잔해가 북이 사전 예고한 구역에 낙하하고 위성이 2번 연속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볼 때, 유도조종과 자세제어 등을 포함한 위성발사체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2016년에 발사한 광명성 로켓은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와 같은 발사체로 보이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은 2016년에 은하 3호에 탑재된 광명성 4호(위성)가 궤도진입에 성공해 영상신호를 보내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성 발사의 주목적이 ICBM용 장거리 로켓 개발을 위한 기술 성능에 대한 검증이었기 때문에 설사 사실일지라도 군사위성 자체는 초보적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무게 200kg으로 추정되는 광명성 4호는 97.4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근지점 고도 494.6km, 원지점 고도 500km의 극궤도를 돌고 있고 주기는 94분 24초입니다. 한편 발사 초기에 위성이 궤도에서 텀블링 상태였으나 그 후에 위성 하단부가 일관되게 지구를 향해 자세를 잡은 것은 안정성 면에서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 위성관측소와 위성 간에 정상적인 통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이 미국을 압박은 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 Fury)를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ICBM이 아닌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2003년 발사된 일본의 첫 정찰위성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광학 위성(EO/IR)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다양한 군사위성을 운영하고 있고 최고 해상도는 15cm 수준입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해 총 7기(EO/IR 광학 위성 3기, SAR 레이더 위성 3기, 예비 레이더 위성 1기)를 운용하고 있고 해상도는 40cm 수준입니다. 2021년 발사될 광학 8호는 해상도 25c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없으나 2023년까지 4기(EO/IR 1기, SAR 4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북핵 대응능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낙관적 기대로 북핵 위협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피할 데가 없는 진실의 문 앞에 섰습니다. 북핵 관련 불편한 진실은 세 가지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생존의 길이 열립니다.

첫째, 북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은 단 한 번도 핵 포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오히려 강력한 핵무장 의지를 계속 천명했을 뿐입니다.

둘째, 2017년 12월 김정은이 외친 ‘핵 무력 완성’은 북 비핵화 협상은 진행 중이 아니고 종결됐다는 선언입니다. 북 비핵화 협상은 김정은의 핵 포기 결단이 선행돼야 시작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미·북 협상의 주제는 사실상 북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 또는 군축입니다.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겉으로는 북의 주장을 일축하며 비핵화를 외쳐도, 내심 물 건너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북 협상이 잘 돼도 ‘완전한 비핵화(CVID, FFVD)는 미래 노력의 방향’이라는 공허한 외교적 수사로 끝날 것입니다. 동결 또는 군축을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치명적인 재앙에 맞게 됩니다. 북핵 동결이나 군축은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은 그대로 둔 채 미국을 위협할 핵 능력만 더 개발하지 않거나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이 본토의 안전을 위해 동맹의 안전은 희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동맹은 결정적 위협에 처한 가운데 우리 혼자 북핵에 맞서는 처지에 놓입니다. 북핵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은 더 위험해지는 역설(paradox)이 현실이 됩니다.

셋째, 따라서 실질적인 북핵 대비태세 구축을 국가 최우선 과업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동맹과 자강(自強)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핵을 억제하되, 억제가 실패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것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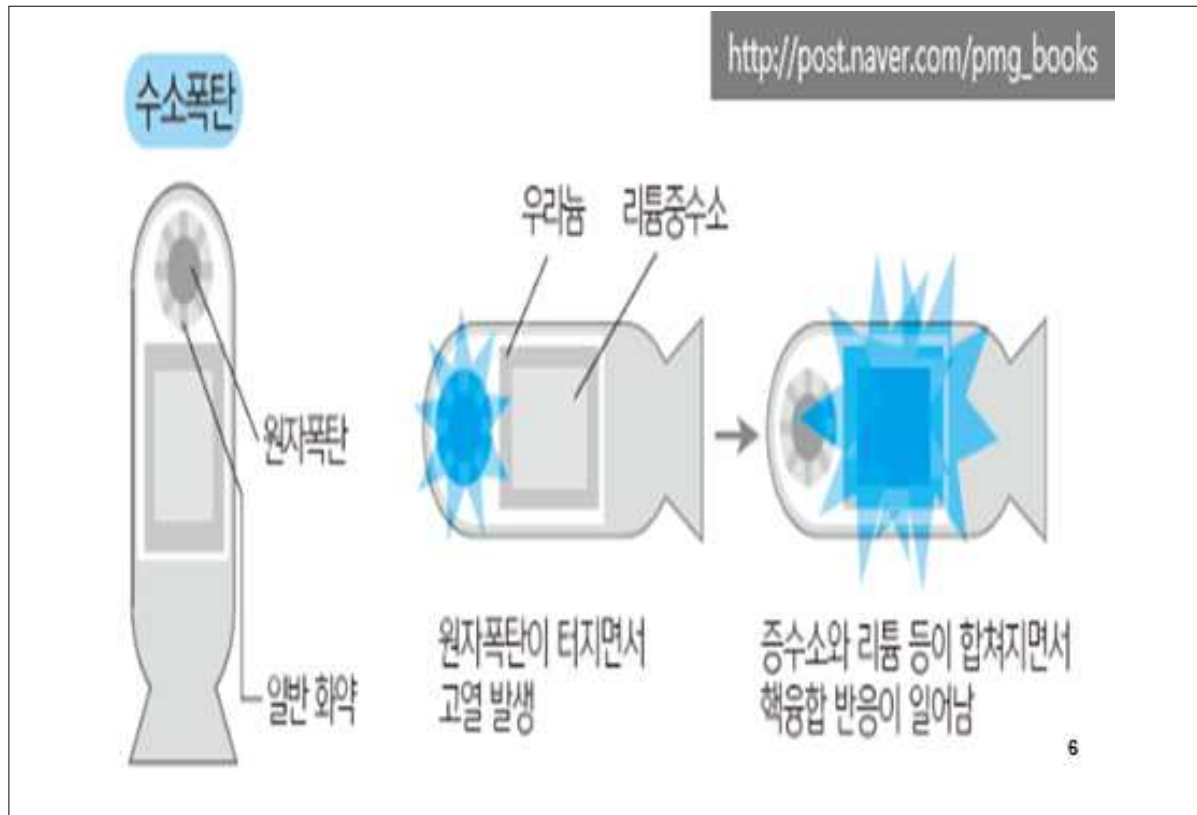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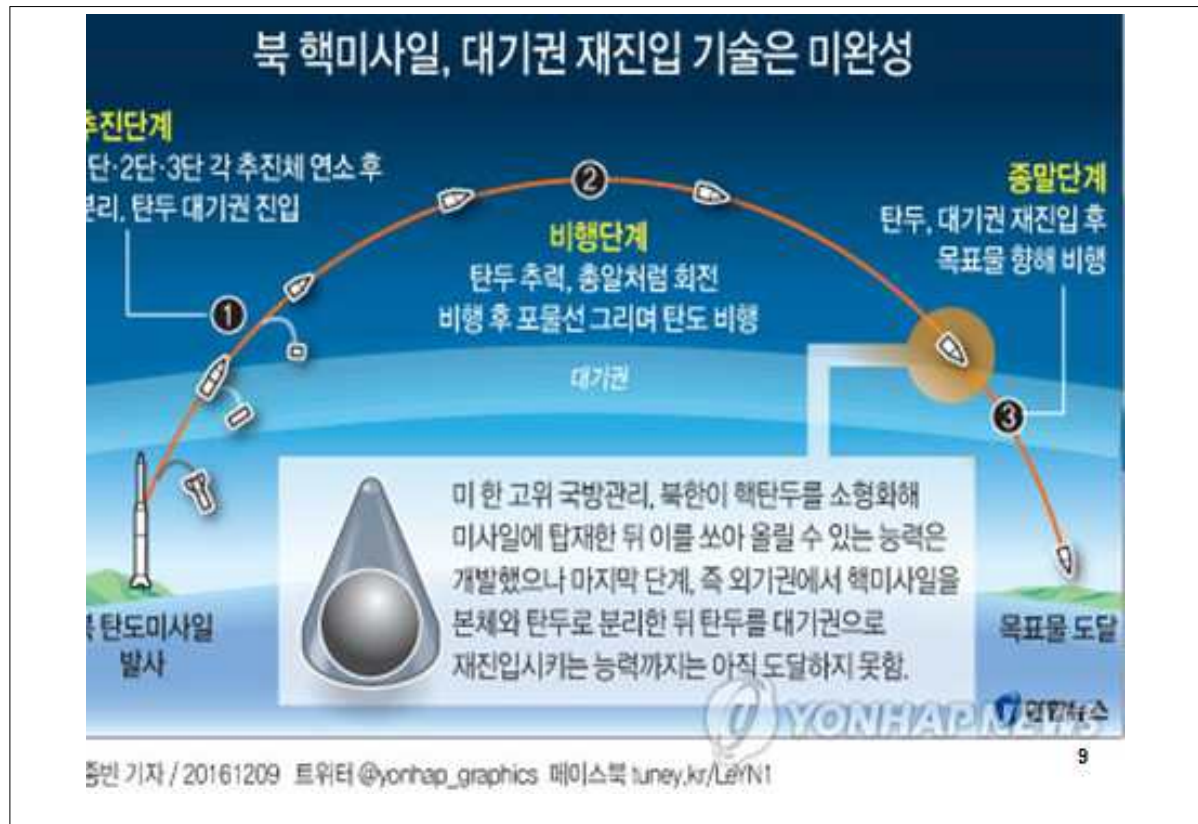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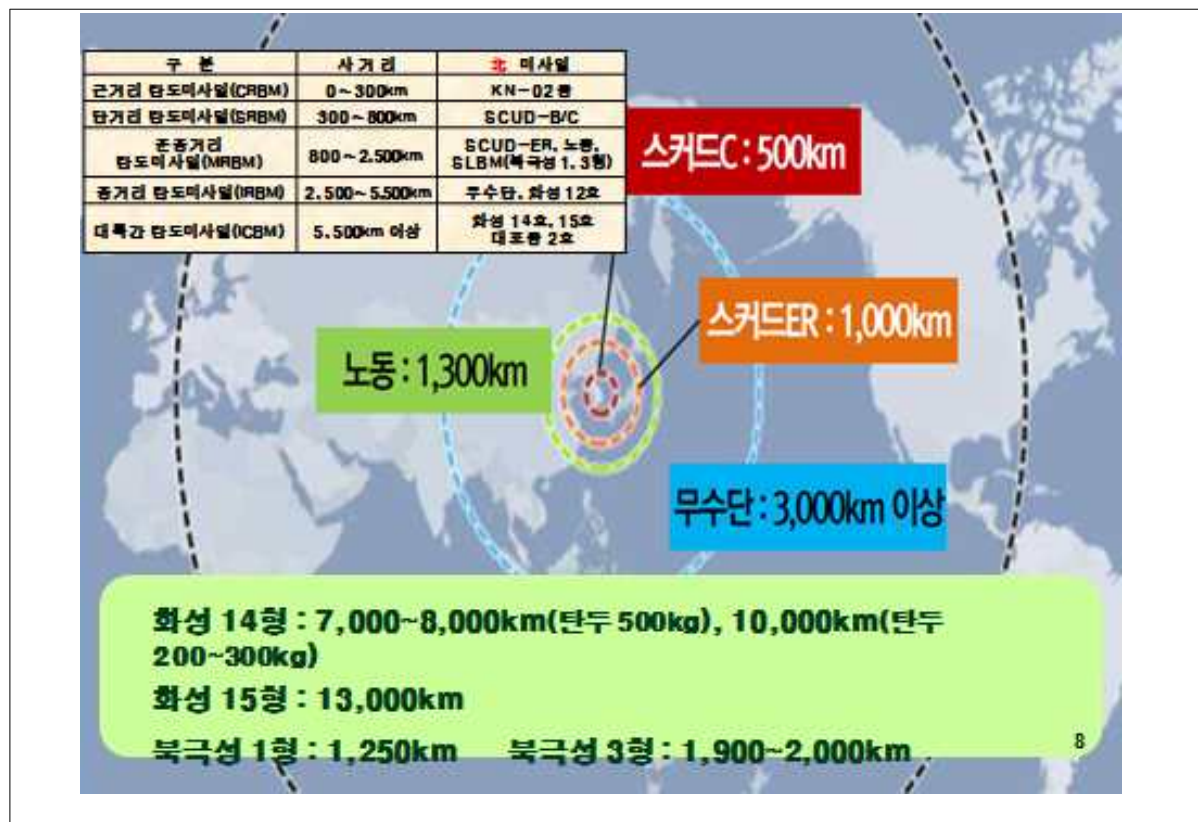
北 비핵화, 왜 실패했나?

1. 동기와 대가의 不一致(mismatch)
2. 협상과 제재의 관계에 대한 誤解(misunderstanding)
3. UN 대북제재의 구조적 矛盾(contradiction)

北 非核化 가능할까?











<핵무장 국민결의대회>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발제 2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한 회고와 반성

■ 조 갑 제

조갑제TV 대표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한 회고와 반성’ 요약

논의의 출발점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北核(북핵)정책의 상관성이다. 흔히 주사파라고 하지만 이는 ‘김일성파’라고 불러야 문제의 본질을 直視(직시)할 수 있다. 김일성 숭배자들이므로 김일성의 유훈인 핵보유를 반대할 리가 만무하다.

4.27 판문점 선언을 문장대로 해석하면, 문재인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기도록 할 것인가(혹은 어떻게 해야 핵위협이 잘 먹히는 조건을 만들 것인가, 그리하여 핵인질로 잡힐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옳다.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김정은을 위한 것인가? 거짓통계에 근거하여 밀어붙이는 脫원전 정책도 핵개발 능력의 원천적 말살을 의도한 것이라고 봐야 안전할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核(핵)’을 한 번도 꺼내지 않으면서 對北(대북)퍼주기만 이야기한 것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일편단심, 또는 풀서비스 맹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정권을 향하여 자위적 핵무장을 호소하는 것은 희극적이다. 오히려 이 정권의 반역성을 폭로, 국민을 자극하여 생존 차원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 민족, 평화, 화해라고 사기치고 있다. 남북간 합의문에 나오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나 ‘평화경제’는 좋은 단어를 비논리적으로 연결, 국민을 속이려는 말장난으로서 ‘비 오는 달밤에 단 둘이 홀로 앉아 흘러간 미래를 추억한다’ 식이다.

[Debates over South Korean Bombs for Self-Defense]

Gab Je Cho,
Representative, Cho Gab Je Youtube Channel

The debate whether or not South Korea go nuclear should start from the relations betwe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ideology and its nuclear polic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entral problem of Moon's policy, we should start by calling the *Jusapa* (*Juche* ideology school) "Kim Il-song school." Kim Il-song worshiper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North's nuclear bombs simply because nuclearization is dying instruction of their great leader Kim Il-song.

By signing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th of 2018, Moon Jae-in virtually promised full-support for Pyongyang's nuclearization. The Declaration does not deal with how to be prepared against the North's missile attack, but focuses in fact on how to make Seoul defenseless and vulnerable and how to help North Korea easily take South Korea hostage.

The Moon administration have not deployed THAAD in Seoul area, does not conduct nuclear civil defense drills. In stead, it designated the no-fly zone over the area adjacent to Seoul. All these policies are for Kim Jong Un, not for safety of South Koreans. We have reasons to regard Moon's decision to phase out nuclear power plants on the basis of tweaked statistics as an attempt to destroy the nation's nuclear capability. Moon Jae-in never mentioned 'the North's nuclear matters' in his New Year address while emphasizing lavish support to North Korea, thus reconfirming his unchanging loyalty to Kim Jong Un.

Therefore, talking about nuclearization for self-defense to this government is a comedy. Rather, we should expose treasonous nature of the Moon government to the public and let people aware of the necessity of South Korean bomb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urvival. Moon Jae-in has camouflaged his deeds as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our ethnic unity,' 'peace,' 'reconciliation,' etc. Like this, he has served Kim Jong Un's pleasure while sacrificing safety of South Koreans. The Panmunjom declaration includes such deceitful wordings like 'balanced inter-Korean development and shared prosperity,' or 'peace economy.' But this is no more than an irrational and deceptive listing of good sounding words. "I sat alone with her under moon-shine in a rainy night...." This poem may sound nice. But, does it make any sense?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한 회고와 반성 - 30년 관찰자의 메모 / 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접근

조 갑 제
조갑제TV 대표

국가엘리트의 책임: 자주국방의지 포기

필자는 1990년 4월호 월간조선에 ‘한반도의 핵게임’이란 제목의 기사를 쓴 이후 30년 동안 北核문제를 취재해왔다. 소감을 정리한다.

1. 한국의 국가엘리트 층이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즉 구경꾼 입장에서 핵문제를 다뤘다. “김정은이 설마 쓸까, 미국이 가만있을까.”
2. 북핵문제를 국가생존과 자신의 實存(실존)문제로 여기고 달려드는 고위공직자를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대통령 포함).
3. 실천계획을 세워야 할 공직자는 논평자나 구경꾼이고, 논평자는 실현 불가능한 空想(공상)이나 原論(원론) 설파에 치중하였다.
4. 박정희 이후 어떤 정치지도자도, 어떤 주요 언론사도 국민들에게 핵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린 적이 없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본질과 대책을 단 한 번이라도 실감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가? 없다!
5. 한국 우파세력의 對美(대미)의존적 습성이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을 초래하였고, 국민 속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 적당히 살자는 공짜심리가 만연하였다.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對共(대공)경계심과 적개심이 약화되고 자위적 핵무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
6. 안보당국자도 구경꾼 입장에 서니 북핵 능력을 축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대평가해도 모자랄 판인데 애써 적의 핵능력을 낮춰보면서 대응시간을 늦추었다. 어차피 유엔안보리나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란 회피적 자세는 국민들의 무감각을 불렀다. 이런 자세는 종북좌익 세력의 경멸을 사고, 무조건적 평화론이 확산되는 토양이 되었다.
7. 한국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자위적 핵무장 이야기가 의미있게 나오지 않은 아마도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고 예방타격론이 거론된 적도 없다. 이 모두가 한미동맹에 안주하여 무사안일을 추구한 결과이다.
8. “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면 국민정신은 반드시 타락한다.”(이스라엘 국방 전문기자의 충고)
9. 경제력에서 북한의 50배나 되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외국군의 도움을 받지 않는 북한정권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비겁함이 우리의 생명줄인 한미동맹에서 나왔다는 逆說(역설)!

10.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된다.”(토마스 칼라일)

11. 박정희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학생데모는 계속될 것이다”고 했다. 안보 무임승차가 국민의 생존요령이 된 바탕에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고, 국군과 국민을 核前(핵전)무장해제 시켜도 반항하지 않는 살찐 돼지 상태를 완성하였다.

12. 이런 상태에서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포함)이 가능할까?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편이다!

北核(북핵)은 군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더 상위개념인 정치적, 이념적으로 접근해야 대전략이 나온다.

논의의 출발점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북핵정책의 상관성이다. 흔히 주사파라고 하지만 이는 ‘김일성파’라고 불러야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다. 김일성 숭배자들이므로 김일성의 유훈인 핵보유를 반대할 리가 만무하다. 4·27 판문점 선언을 문장대로 해석하면 문재인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기도록 할 것인가(혹은 어떻게 해야 핵위협이 잘 먹히는 조건을 만들 것인가, 그리하여 핵인질로 잡힐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옳다.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김정은을 위한 것인가? 거짓통계에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도 핵개발 능력의 원천적 말살을 의도한 것이라고 봐야 안전할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核’을 한 번도 꺼내지 않으면서 對北퍼주기만 이야기한 것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일편단심, 또는 풀서비스 맹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정권에 대하여 자위적 핵무장을 호소하는 것은 희극적이다. 오히려 이 정권의 반역성을 폭로, 국민을 자극하여 생존차원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 민족, 평화, 화해라고 사기치고 있다. 남북간 합의문에 나오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나 ‘평화경제’는 좋은 단어를 비논리적으로 연결, 국민을 속이려는 말장난으로서 ‘비 오는 달밤에 단 둘이 홀로 앉아 흘러간 미래를 추억한다’ 식이다.

핵인종(核人從)의 정체

1. **핵인종**: 한반도의 3大 문제, 즉 北의 核미사일 실전배치,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탄압, 그리고 남한의 從北(종북) 세력 발호는, 북한정권이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핵인종(核·人·從)’ 문제는

북한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國力(국력) 팽창, 북한의 核強國化(핵강국화)에 한국의 좌경화가 결합되면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북한노동당 정권 해체를 의미하는 자유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命題(명제)가 된 것이다.

한국이 가진 돈과 자유의 힘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을 해체, 核을 無力化(무력화)시키는 한국식 비대칭 전략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신라가 잘 사는 백제와 강한 고구려를 흡수 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그런 절박감을 김정은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위험하다. 링컨이 이야기하였듯이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진실을 알리는 것은 지도층의 책임이다.

2. 과소평가: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핵능력을 축소 평가해왔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은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實戰(실전)배치하였다고 봐야 한다. 수십 발의 핵폭탄과 1000기 정도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있고,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풀가동할 경우 핵폭탄 보유량은 10년 안에 100개를 넘을 것이다. 종합적 核戰力(핵전력)을 갖춘 것이다. 김정은의 정신적 불안과 核미사일 관리체제의 허술함, 그리고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 核재앙의 가능성을 높인다. 김정은이 核 발사단추를 누르려 할 때 곁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3. 김정은의 대전략: 김정은은 미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核戰力과 남한의 從北(종북)세력을 결합시키면 韓美日 동맹을 無力化시키고 한국을 고립시켜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김정은은 核戰力을 믿고 재래식 군사도발을 가한 다음 한국이 반격하면 핵사용을 위협,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승부를 걸어올 가능성도 있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백령도나 한강 북부 지역을 기습 점령한 뒤, ‘현위치 휴전’을 제의, 불응하거나 반격하면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협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4. 수도권 의 무장해제: 수도권은 핵무기에 가장 취약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과 행정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北이 核미사일을 쏘면 5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미사일 방어망과 防核(방핵)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핵민방위 훈련도 고의로 하지 않는다. 정부의 ‘킬 체인’은 핵이 없는 한국이 핵을 가진 北을 선제공격한다는 개념인데,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善意(선의)의 거짓말’이 아닌가?

5. 핵우산: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한국이 핵공격을 당한 다음엔 믿을 수 없다. 핵폭탄으로 국가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回生(회생)이 불가능해진 한국을 위하여 북한을 핵으로 보복하도록 미국의 의회와 언론이 허용할 것인가? 미국이 핵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김정은이 믿으면 모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엘리트가 비겁하니 국민이 타락했다

6. 대륙형 독재로의 회귀: ‘외환보유고 3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親中 및 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고 있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자유우파+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敵對的(적대적)인 일본’이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이 사태를 방지하면,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從北 세력의 발호 속에서 정치적으로 北에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정권+북한정권+親中 및 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은 계급투쟁론에 기반을 둔 ‘反자유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한국을 압박하면 필연적으로 자유민주적 정체성이 도전을 받아 國體(국체)가 훼손되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私有(사유)재산권, 國民主權(주권)주의가 협박을 당하고,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자유도 규제될 것이다.

7. 국군의 분열: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이 헌법수호의 기치를 내걸면서 反정부 투쟁에 나서고, 좌파정권이 이를 탄압할 경우, 국군의 결심이 중요해진다. 군이, 헌법 5조에 따른 국가안보의 최종수호자 역할을 고민하게 된다면 內戰的(내전적)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군이 이념적으로 분열될 수도 있다. 이는 시리아식 내전으로 가는 길이고 북한군의 개입을 부를 것이다.

8. 국민의 타락: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國體(국체)와 路線(노선)이 동시에 바뀌면서 해양세력에서 이탈, 대륙세력 영향권에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는 약화되며, 자유통일은 멀어지고, 분단고착이나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경제력(GDP)이 북한의 50배인 한국이 이렇게 불리한 처지에 빠진 것은 국가 지도부의 자주국방 의지 포기 때문이다. 지도층이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을 포기하고 정치인은 저급한 권력투쟁에 전념하고, 국민들은 웰빙에 탐닉한다.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으로 敵과 동지를 가르는 彼我(피아)구분의 필요성이 사라지니 眞僞(진위)구분, 善惡(선악)분별이 모호해지고, 법치주의도 약해지면서 무책임하고 나약한 국민으로 전락하였다.

사령부를 포격하라!

9. 자주국방 의지의 회복: 北核 대책은 자주국방 의지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안전, 자유, 행복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생존에 대한 책임성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이 北核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위기의식과 자주국방 의지를 불러낼 수 있다. 국민의 생존 의지만큼 강력한 정책과 전략은 없다.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核저지의 動力(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NPT 탈퇴 및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실시, 압

도적으로 통과되면 한국정부는 국민여론을 업고 강력한 외교력을 구사할 수 있으며 종북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문재인 정권하에선 불가능).

10. 핵간첩 소탕: 미국 법원은 핵개발 정보를 소련으로 넘긴 과학자 로젠버그 부부를 국가반역죄로 처형했다.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정책적으로, 금전적으로, 정보적으로 도와준 자들을 핵간첩으로 규정, 단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좌파정권에서 북한정권에 지원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만 해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우파 정권에서 핵간첩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더라면,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핵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하였더라면 탄핵사태나 문재인 정권 출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역대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친북정권의 반역과 利敵(이적)행위를 낱알이 폭로, 응징하는 것이 체제를 지키는 길이다.

11. 북한자유혁명 전략: 대한민국은 대성공의 역사에도 북한 자유화라는 헌법적 명령을 放棄(방기)해왔다. 반면, 북한은 체제붕괴 위기 속에서도 집요하게 對南(대남)공산화를 추구해왔다. 이 차이가 승패를 가르고 있다. 대다수의 우파는 主敵(주적) 김정은을 상대로 한 정면대결 대신에 종속 변수인 문재인 좌익정권의 失政(실정)만을 공격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하여 이대로는 天運(천운)으로 총선에서 이겨도 大勢(대세)를 뒤집을 수 없다. ‘그림자’(문재인 정권)가 아니라 실체인 독재자 김정은과 싸우는 북한 자유화 혁명을 북핵문제 해결의 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 자유화 혁명은 헌법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이 天賦(천부)인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독재자 김정은 퇴진, 조선노동당 해체, 북한지역 자유총선거 실시’를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정통성을 와해시켜 독재자 김정은과 남한 좌익을 동시에 퇴출하는 남북한 이중(二重) 정치혁명, 즉 일석이조(一石二鳥) 전략이다.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김정은을 치는 게 훨씬 쉽다. 한국전에 비유하면 문재인과 싸우는 것은 낙동강 전선의 보병전투이고 김정은을 치는 것은 인천상륙작전이다. 사령부를 포격하라!

돈이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12. 돈과 자유의 무기화: 한국식 非대칭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장점인 돈, 기술, 정보, 인권,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對北공작과 핵미사일방어망 건설에 집중 투자한다. 소국민 풍선보내기 운동, IT 및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科學的 心理戰(과학적 심리전), 휴전선의 對北방송 재개,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운동 등등. “공산주의자와 싸울 때는 그들과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반대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조지 오웰의 이 말에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는 돈을 써야 한다”이다. 돈이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써야 한다.

13. 헌법의 힘: 통합진보당을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 폭력혁명 정당’으로 규정,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 책임자에 대한 斷罪(단죄)를 건의한 유엔총

회의 결의문을 활용, 汎세계적 포위망을 만든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은 ‘인류의 公敵(공적)’이고, 이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좌파는 ‘악마의 제자들’이다. 대결 구도를 남북이 아니라 ‘김정은 vs. 한민족 전체’ ‘김정은 vs. 인류 전체’로 만들 수 있다.

14. 비핵화 사기극: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 사기를 실감 있게 폭로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야 한다.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종속시키려는 반역이며,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국민들을 인질로 바치려는 利敵(이적), 與敵(여적)행위임을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야 국민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15. 核 vs. 核: 한국의 핵보유 방식은, 자체 핵개발 이외에도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핵우산 조건의 강화 등 간접 보유 방식이 있지만 정권교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위적 핵무장을 위한 압도적 여론을 만들고 이를 정책과 선거에 반영시키려면 역시 선전이다.

16. 국민혁명에 의한 종북반역정권 타도, 북한자유혁명에 의한 김정은 정권 타도는 동전의 兩面(양면)인데, 김정은을 주적으로, 문재인을 종속변수로 보고 사령부를 타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 자료: 드골의 결정적 질문

1961년 6월 초 파리를 방문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頂上(정상)회담 기록 중 核전략을 다룬 부분이 흥미롭다.

<드골: 지금과 같은 NATO는 수명이 다하였다. 이 조직의 핵심적 존재 목적은 미국의 핵무기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만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던 시대는 지났다. 미국은 더구나 다른 곳에서도 할 일들이 많다. 미국이 통합적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다. 최근 프랑스 장군들이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프랑스를 자기들이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지의 不在(부재)가 한 원인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로 나타난다. 자주국방 의지의 결여는 동맹을 약화시킨다. 애국적 동기가 있어야만 長期戰(장기전)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먼저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었기에 유럽의 안전은 유럽 국가들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의 도움 없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케네디: 미국에 있어서는 유럽의 방어가 미국의 방어와 마찬가지로이다.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이유는, 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모스크바

에 想起(상기)시키기 위함이다. 핵무기는 먼저 사용하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였다고 해서 우리는 핵무기 사용을 유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별도로 국방체제를 갖춘다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 것이다. 즉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은 불만이 생길 것이고 중립화로 몰릴지 모른다.

드골: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원자폭탄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注: 다른 나라의 사태에 의하여 自國(자국)의 핵폭탄 사용 與否(여부)가 좌우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 이게 프랑스가 미국에 핵무기를 지원해달라든지 핵개발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미국은 자기 영토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만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하지 않나? 국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법이다. 러시아와 프랑스도 그럴 것이다. 귀하가 미국인은 유럽과 미국을 같은 존재로 본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 말을 믿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럴까? 내가 만약 귀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이 무기를 써야 할지 자신이 없을 것이다. 벌써 미국은 기준을 높이지 않았나, 즉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時刻(시각)을 늦추지 않았나?

케네디: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은 局地的(국저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약속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NATO에 대한 공격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임이 명백하다. 장군(드골)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고립주의적이었지만 달라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 취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 우리 동맹국들은 안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끼리의 신뢰를 강화할 때 모스크바에 대하여 우리가 베를린 위기에 즈음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믿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는 드골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러시아’를 ‘북한’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뜻이 된다.

“만약 북한이 미국은 한국을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답은 자위적 핵무장이다.●

<핵무장 국민결의대회>

핵무장 추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발제 3

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

■ 김 태 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 요약

핵균형 전략(nuclear parity strategy)이란 상호 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의 확보를 통해 상호 억제와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억제 전략을 말한다. 상대가 나를 해칠 수 있다면 나도 상대를 해칠 수 있어야 상호 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며, 이 논리의 신빙성은 냉전동안 핵전쟁을 억제한 일등공신이 상호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확실편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었다는 사실에서 증명되었다.

한국이 스스로 핵능력을 키워 핵균형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단기적 이유는 그것이 국가생존을 위해 절실하기 때문이며, 장기적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팽창주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구(舊)사회주의 블록과의 역내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핵무장 자유동맹’을 모색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균형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섯 단계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 단계는 재래전력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선제(kill-chain)·방어(KMAD)·응징(KMPR)’이라는 핵심 역량으로 하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왔다.

두 번째 단계는 핵무장 잠재력을 함양하는 것으로서 결단을 하면 최단 시간 내에 핵무기들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과 능력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동맹조약에 핵우산 조항 및 자동개입 조항 신설, 미 공격용핵잠수함(SSBN)의 동해 상시 배치 등을 통해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단계는 독자적 핵무장을 결행하는 단계인데,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무장 자유동맹’ 결성에 합의하는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오히려 안보 빗장을 푸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부국강병을 위해 헌신했던 박정희의 정신을 본받아 핵균형에 나설 수 있다.

[Toward Inter-Korean Nuclear Parity & Nuclear-Armed Freedom Alliance]

Taewoo Kim

Strategic Planner, Korean Retired Generals & Admirals Defending the Nation (KORGAD)

Nuclear parity strategy refers to a nuclear deterrence strategy that maintains mutual deterrence and strategic stability through securing mutual nuclear vulnerability. It is based on the logic that if adversary can harm me then I should also be able to harm him. The credibility of this strategy was amply proven during the Cold War as the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strategy based on mutual vulnerability played a key role in preventing nuclear war.

Now South Korea needs nuclear capability for short-term and longer-term reasons: immediate national survival through nuclear parity vis-sa-vis North Korea, and strategic balance in East Asia. Today, under the increasingly visible neo-Cold War confrontation, the former socialist bloc,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ll nuclear weapon states, are intensifying military collaboration. Unless their nuclear prowess and Chinese expansionism are counterbalanced properly, the strategic balance in East Asia will tip in favor of the non-democratic powers, thus compelling a grave strategic loss on the part of the U.S. This means that liberal democracies in this region including the U.S. and its allies may have to seek a "nuclear-armed freedom alliance" in the future. This is why South Korea needs to pursue nuclear parity through five steps.

The first step is to continue to deter the North's nuclear threat through conventional forces. To that end,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attempted to construct a 'Korean conventional triad' composed of preemptive strike (Kill-chain), missile defense (KAMD) and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capabilities (KMPPR). The second step is to foster nuclear potential and infrastructure so that it can produce nuclear bombs in the shortest time possible if it decides to do so. The third step is strengthening of the U.S. nuclear umbrella and extended deterrence through various ways: deployment of the U.S. SSBN in the East Sea, revision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to include "automatic intervention" or to specify "nuclear umbrella," etc. The fourth is to redeploy U.S. tactical nuclear weapons on South Korean soil. The final step is to go nuclear, with an agreement within the alliance framework, to defend the nation from the North's asymmetric WMD threat or to participate in the "nuclear-armed freedom alliance."

Given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till immersed in the fake peace game with the counterpart in Pyongyang, shows no interest in this direction of policy lines, the people of South Korea should wake up and rekindle the spirit of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who devoted himself to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

김 태 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 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이래 외교가 고립되고 경제와 안보가 붕괴되는 중에 동맹마저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를 목도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로 비감한 심정으로 오늘 한반도에 핵균형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남북한 간 핵균형은 단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절실한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역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구(舊)사회주의 불력과 전략적 균형을 이루어 평화와 안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더 멀리서는 통일이한국이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정체성과 독립성 그리고 번영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핵균형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왔어야 하는 한국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에 더하여,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 의한 자해적(自害的)인 안보 역주행을 목도하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동문서답(東文西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동쪽을 가리키면 답은 서쪽에 있다”라는 뜻으로 회자되는 이 우스개 소리가 가슴에 와닿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저는 박정희를 미워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박정희 혁명은 어렵게 대구 시의원에 당선되신 아버지를 실직자로 만들어 저희 집안을 가난으로 내몰았고, 대학시절에는 총학생회장에게 당선되었다가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이후 저는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승승장구했지만 이런 저런 사연으로 대한민국을 핵무장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오기부림을 가슴에 담았고, 해서 3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늦깎이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핵문제를 전공하여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다양한 핵관련 시설들과 방산업체들을 찾아볼 기회를 가졌는데, 가는 곳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강병을 꿈꾸며 뿌려놓은 것들을 발견하고는 그분이 독재자이기보다는 애국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을 정신적 멘토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그럼에도 저는 핵무장 자체를 주장하는 것은 보류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약육강식(弱肉強食) 핵세계의 속성을 알게 되었고, 약자가 섬부른 핵무장을 시도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무기 자체만을 제외한 핵무장 준비’를 주장했고, 이를 ‘평화적 핵주권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당시에는 이런 주장마저 ‘과격화 주장’으로 매도당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연구실을 쓰면서 함께 핵문제를 연구했던 신성택 박사와 저는 한국이 핵 보유 북한으로부터의 시달릴 것이 뻔한데도 왜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해야 하느냐, 왜 우리는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한번 밖에 가질 수 없느냐고 한탄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우리 둘의 모토는 “라면을 먹고 살아도 태극기는 펴려야 한다”였습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을 통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S형, 왜 우리는 태극기 휘날리는 항공모함을 가지면 안됩니까? 왜 우리는 태극마크 선명한 핵미사일이 지켜주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까. 정치인들 꼬락서니를 보니 아마도 우리 살아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형, 우리 저승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납시다. 저승하늘에 태극마크 빛나는 핵미사일 날립시다.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저승바다에 항모함 띄웁시다”가 책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강제사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 늙으신 부모님께 불효하고 아내에게 말못할 고생을 강요하는 몹쓸 남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벤구리온, 드골, 네루 그리고 박정희

세계에는 일찍부터 핵무기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조국에 충성하면서 남달리 애국심을 발휘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초대 수상,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인도의 네루 수상 등이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는 벤구리온 공향이 있고, 네게브 사막의 도시 베르세바에는 벤구리온대학이 있습니다. 독립투사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벤구리온(David Ben Gurion: 1886~1973)에서 따온 명칭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을 하자마자 이틀날 주변 아랍국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벤구리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각자를 떠돌거나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2만 평방km라는 손바닥 만한 땅에 세운 나라였지만, 정신력은 최강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친 아랍국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1차 중동전쟁 직후부터 벤구리온은 인광석에 포함된 우라늄을 찾기 위해 네게브 사막을 뒤졌고, 이후 사막 한 가운데 디모나(Dimona) 핵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연구로, 중수공장, 농축시설 등을 차례대로 건설하여, 오늘날 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핵대국이 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벤구리온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사양하고 사막에 건설된 기부츠에서 농사를 짓고 여행을 보내다가 1973년 87세의 나이로 영면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지 않고 거친 땅에 땀으로 일궈야 한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네 평짜리 침실에 덩그러니 남은 간이침대, 책, 노트 주전자 그리고 찻잔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의 유언에 따라 그를 모세의 광야가 내려보이는 네게브 사막의 아인 아브닷 협곡에 묻었습니다.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도 조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헌신한 애국자였습니다. 드골 장군은 2차대전중 미군에 의해 파리가 해방되던 날 몹시 씩씩해했으며,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핵기술을 차단했을 때에는 더욱 씩씩해했습니다. 이후 독자 핵개발을 향한 드골의 집념은 진실로 대단했고, 1960년 2월 프랑스는 마침내 자국의 식민지인 알제리의 사막에서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위대한 프랑스 만세! 이제 프랑스는 더욱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핵실험 성공 보고를 받고 드골이 했던 일성이었습니다. 드골은 1969년 은퇴한 후 정부가 제공하는

의전을 사양하고 젊은 군인 시절을 보냈던 향리 콜롬베로 들어가 그곳에서 1970년 79세의 나이로 임종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가 남긴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를 국가유공자 묘지가 아닌 콜롬베의 공동묘지에 안장했습니다.

핵강국 인도의 기초를 닦은 네루(Jawaharlee Nehru 1889~1964) 수상도 독립투사이자 애국자였습니다. 인도 대륙은 1947년 독립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네루 수상은 지금은 비록 혼란스럽고 가난한 나라이지만 언젠가는 인도가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수퍼 베이비’라고 불렀고, 중국에 앞서 일찍부터 핵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를 둘러보라. 선진국도 많고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들도 많지만, 세계 네 번째 강대국이 될 나라는 다름아닌 인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954년 인도 의회에서 행한 그의 연설에는 강대국을 향한 혁신과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국강병을 향한 박정희의 집념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네루 수상은 경쟁국 중국보다 앞서 국토 곳곳에 핵연구단지들을 건설하여 핵기술을 확보해나갔지만, 결코 선불리 핵무기를 선보이지는 않았습니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을 하여 핵보유국이 되었을때 인도 전역에서 대응적 핵무장 요구가 분출했지만, 인도는 차분히 인내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첫 핵실험을 하고부터는 축적된 기술과 자원을 이용하여 단숨에 세계 제4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날 인도는 13개의 핵연구단지에 약 30기의 각종 원자로를 운영하며, 전국에 우라늄 광산, 정련시설, 중수공장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듯 벤구리온, 드골, 네루 등은 자신의 조국이 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위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위험에 대처하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 핵무장을 시도했고,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소박한 여생을 보내다가 무일푼 빈손으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박정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무역입국을 통해 외화를 벌였으며 1971년 미국이 7사단을 철수했을 조국을 지켜내고 부강한 미래 강국을 만들기 위해 핵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74년에 프랑스와 재처리공장 건설계약을 맺었고, 1975년 미국의 압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난 후에도 먼 미래를 매다보면서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중수로인 월성1호기를 도입했습니다. 중수로는 경수로와는 달리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박 대통령은 1983년 이 원전이 가동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79년 김재규의 흉탄으로 서거하셨습니다. 오늘날 좌파 세력들은 박정희의 한과 애국심이 서린 월성1호기를 영구 해체하려고 난리입니다. 7,000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시켰음에도 한사코 해체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족적을 지우려는 저들의 간교함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 청와대 금고에서 발견된 돈은 10억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벤구리온, 드골, 네루 등과 같이 철저하게 애국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 지도자였습니다. 그토록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박정희도 자신의 사후에 생가가 보이는 금오산 자락에 묻어달라고 했을 지도 모릅니다.

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을 위해

이제 우리는 박정희 정신을 되새기며, 당면 위협과 미래 위협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라도 핵균형 정책을 취해나가야 합니다. 앞 발표자께서 설명했듯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성과 북핵’이라는 매우 분명한 당면 위협이 있습니다. 미래 위협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 그리고 미·러 간 벌어지는 신냉전이 우리에게는 엄중한 미래위협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를 두둔하면서 중·러·북 삼국 간의 군사적 결속을 통해 새로운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중국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당면 위협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한국의 정체성, 독립성, 가치 등을 위협하는 엄중한 미래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래의 중국을 예상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일원이 될 것이라는 그로티우스(Yugo Grotius)적 예상도 있고, 힘을 가진 나라는 반드시 힘을 휘두르게 되어있기에 중국 역시 힘을 앞세우고 패권을 추구할 것이라는 홉스(Thomas Hobbes)적 예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중국의 행태를 종합하건대 그로티우스적인 중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해 한국이 택해야 할 선택도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공조라는 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존·번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이 길일 것입니다. 2017년 출범 이래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이라는 좌파적 수정주의는 결코 우리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언젠가 탄생할 수 있는 핵무장 자유동맹(freedom alliance)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의 끝없는 팽창주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핵균형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국은 이를 ‘아시아판 NATO’로 비난하겠지만 ‘핵무장 자유동맹’의 출현 여부는 중국에 달린 일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스스로 핵무장을 자제하면서 미 핵우산에 의존하는 체제 하에서 중국이 중·러 전략적 제휴 하에서 계속해서 핵군사력을 증강하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방조한다면 동아시아의 핵균형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핵무장을 통해 역내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일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연구기관과 정부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핵무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단계적 핵균형 전략을 수립·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박정희 정신입니다. 박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균형을 위한 다섯 단계의 조치

핵균형이란 상호 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의 확보를 통해 상호간 억제와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전략을 말합니다. 상대가 나를 해칠 수 있다면 나도 상대를 해칠 수 있어야 상호 충돌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핵억제의 기본이며, 이는 과거 냉전동안 미소 간의 핵전쟁 발발을 억제한 일등공신이 바로 상호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확실편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었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핵균형을 모색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섯 단계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재래전력을 통해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미 핵우산을 보완하고 핵우산 약화시 독자적 대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선제(kill-chain)·방어(KMAD)·응징(KMPR)’이라는 세 종류의 군사역량을 의미하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핵무장 잠재력을 함양하는 것으로서 핵무장 결단시 최단 시간 내에 1세대 분열탄은 물론 2세대 융합탄까지 제조할 수 있는 모든 기반과 능력을 사전에 갖추어 두자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미약하나마 핵균형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동맹조약에 핵우산 조항 및 자동개입 조항 신설, 미 공격용핵 잠수함(SSBN)의 동해 상시 배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핵공유 협정 하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것인데, 세 번째 및 네 번째 단계에서는 상당 수준의 핵균형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결행하는 단계로서, 이로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 핵균형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구사회주의 진영 간의 진정한 핵균형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북핵 위협과 신냉전 상황을 종합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상당 수준 진전이 되어있어야 마땅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하여 지금쯤 상당 수준의 핵무장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박정희 이후 그를 계승할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지금은 한미 간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조치들의 실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탈미·반일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술핵 재반입에 대한 오해와 이해

미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는 달리 미국의 자산인 핵무기들을 반입하는 것이어서 현 미국의 반확산정책과 상충성이 없으며 NPT 탈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독자 핵무장 결행 이전에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을 반드시 짚어야 하며, 그것만으로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핵균형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017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반대자들은 핵전쟁 및 핵사고의 가능성, 북한 비핵화 요구 명분의 소멸,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 촉발, 엄청난 예산 부담, 중·러의 반발, 국론 분열 등 많은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그중에는 왜곡되었거나 과장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중·러의 반발이나 국론의 분열은 충분히 예견되는 단점들이 맞지만, 이런 단점들은 국가생존에 기여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가지는 장점들과 비교·상쇄되어야 합니다. 전술핵이 다시 들어오면 한국이 다른 나라 핵무기의 타깃이 되어 핵전쟁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고 핵무기 분실·탈취 등의 우발적 사태(black swan), 비인가 핵발사(unauthorized launch), 기지 오작동으로 인한 우발적 핵전쟁 등의 위험성이 수반된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지만, 이런 단점은 북핵을 방치함으로써 강요당하는 악몽(惡夢)과 안보위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입니다.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군비통제의 역사에서 일방적 우세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수단을 가진 쪽이 스스로 과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대의 친절이나 설득에 의해 그 수단을 내려놓은 경우는 없습니다. 즉, 군비통제에는 성선설(性善說)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의 일방적 핵독점이 소멸되고 핵무기가 북한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 진정성이 있는 협상이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섰고 핵을 포기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술핵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현재의 일방적 취약성(unilateral vulnerability) 상태를 무한정 수용할 때 발생하는 더 큰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크게 과장된 것입니다. 미국이 최근 개발을 완료한 B61-12 전술핵은 1.3kt에서 50kt까지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소형 지하폭발용(bunker buster)이어서 지상의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시키며, 이런 전술핵 30개 정도를 F-35, F-15, F-16 등 한미 공군이 보유한 주력 공군기들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소기의 핵균형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결행은 미국이 기존의 반확산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상충과 그로 인한 동맹파괴를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반대와 동맹파괴 그리고 국제제재를 유발하는 핵무장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영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 아니면 생존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신냉전의 심화와 더불어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이 세계 또는 아시아 차원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만을 남겨둔 채 다른 모든 단계들을 진척시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본, 대만, 호주 등과의 핵협력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친북·친중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제안을 경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극빈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번영을 이룬 70년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좌파적 수정주의 노선을 청산하고 지금까지 기적의 역사를 뒷받침해온 정론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이런 충언을 경청할 정부라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향해 외치고자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보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핵균형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Inter-Korea Nuclear Parity & Nuclearized Freedom Alliance
한반도 핵군형과 핵무장 자유동맹
 핵무장 축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견의대회 (2020.1.17.)

金泰宇
 ▶ 바른사회시민회 공동대표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담위원
 ▶ 전 통일연구원 원장
 ▶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INDO-PACIFIC REGION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한국, 일본, 인도, 영국, 호주

내一生 祖國과 民族을 위하여
 벤구리온, 네루, 드골 그리고 박정화...

이스라엘의 핵지도자
 ▶ David Ben-Gurion 수상: Initiator
 ▶ 실무책임: Simon Peres
 ▶ Golda Meir: Bomb Maker

프랑스의 영광을 위하여!

Super-baby Protection Superpower Making

▶ 닉슨 독트린, 7사단 철수 (71)
 ▶ 핵 미사일 독자개발 착수, 프와 재처리 건설 계약(74)
 ▶ 미 반핵산정책과 상충, 박승례전저 회담(75.8.27)
 ▶ 핵포기 각서
 ▶ 1977 월성1호기 착공, 83 가동
 ▶ 1979 김재규 흥탄 서거

Mutual Vulnerability 왜 핵군형인가?

LIVE 신정환수 특보장관

김태우 박사, 안보특정
문제인 정권, 김정은에게 서울을 받겠다!

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

김태우 지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
62년 생애의 62가지 장면

박정희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입장이 없다!

우리도 핵을 갖자

김태우 지

유사시
북부 戰區 개입태세

서해 내해화
EEZ미확정
KADIZ유린

해무기 억지는 핵(核)무장 뿐이다!
- 평화로 갈라진 전쟁에 대비하자!

현재 및 미래 위협: 한반도 적화·동북아 전략균형 붕괴

현재 위협	
북한	▶ 핵위협, 화생무기 위협 ▶ 기타: 재래도발, 사이버, 해킹...
중국	▶ 西海 내해화, 불법어로, 해상민병 ▶ 기타: 방사능 오염, 미세먼지 등
중러북 핵공모	▶ 대북제재 균열, 북핵 기정사실화 ▶ 핵무장 구사회주의의 블록 부상

미래 위협	
중국	대국공기 强軍起 서해/남중국해 내해화 일대일로, 도련선, 진주목걸이...
러시아	바다를 향한 정책 대령할 절대 재건 북극항로 잠악
중러북 동북아	전대적 재후 강화 동북아 핵균형 붕괴

한국 안보/독립성
위협

- 국방비 부담 가중
- 한국군 위축
- 자유등일 無誤

미세먼지
유입

불법어업

방사능
유입 위험

원전

THAAD
보복

한반도 핵군형 및 '자유동맹'을 향한 단계적 대안	
(1) 핵억제 by 재래전력 Conventional Deterrence	▶ 첨단 신세대 재래무기 확보 ▶ 한국형 3축 체제 활성화: KMPR 중심 역할 필수
(3) 핵우장 잠재력 극대화 Nuclear Potential	▶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폐기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미사일가이드라인 폐기 ▶ 농축, 재처리, 삼중수소 생산 기반, 탄두 설계 능력 등 Core 제외 모든 핵탄두 제조능력 및 투발능력 배양
(3) 핵우산 강화 More Credible ED	▶ 동맹조약 개정(핵우산조항) ▶ SSBN 동해 상시배치
(4) 미 전술핵 재반입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kes	▶ ALCM (B61-12) 30기 내외 ▶ 주한미군 운용 또는 NATO식 공동운용 (Platform: ROKAF B-35, F-15K, F-16) ▶ 한미 MD 통합, 3축 체계 통합
(5) 자위적 핵우장 Independent Nuclear Forces	▶ NPT 탈퇴 (90일전 통보로 가능) ▶ 핵3축체제 (Nuclear Triad) 구축 ▷ 동맹해체시 이스라엘식 Strategy of Ambiguity ▷ 동맹합의시 공개 핵보유. Freedom Alliance 구축

김대우, "한국의 핵우장과 외교 정책: 안보 현실 분석," 한국외교정책학회(KIIPS)-아래미학살리터마실나트릭 (APLIS) 공동학술회의 「포럼」과 행정부의 비확산정책과 한반도」(2017.2.15)
 김대우, "남북 비핵화 지면 또는 실패시 한국의 핵우장 필요하다," 평민출판사, 「한국의 평화 논쟁」(2019.8)
 김대우, "당면 북핵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의 생존전략: 3축 체계, 전술적 재배치 그리고 자위적 핵우장을 중심으로,"
 김대우, "당면 북핵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의 생존전략: 3축 체계, 전술적 재배치 그리고 자위적 핵우장을 중심으로,"
 김대우, "당면 북핵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의 생존전략: 3축 체계, 전술적 재배치 그리고 자위적 핵우장을 중심으로,"

김대우, "당면 북핵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의 생존전략: 3축 체계, 전술적 재배치 그리고 자위적 핵우장을 중심으로,"
 김대우, "당면 북핵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의 생존전략: 3축 체계, 전술적 재배치 그리고 자위적 핵우장을 중심으로,"
 김대우, "당면 북핵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의 생존전략: 3축 체계, 전술적 재배치 그리고 자위적 핵우장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For ROK Defense & For Freedom Alliance

반대론(단점)

- ▶ 핵전쟁: 핵사고 가능성 (Yes, but..)
- ▶ 북한 비핵화 요구 명분 소멸 (궤변)
- ▶ 한반도 군비경쟁 가열 (궤변)
- ▶ 엄청난 예산 부담 (궤변)
- ▶ 중·러 반발 (Yes)
- ▶ 국론분열 (Yes)

찬성론(장점)

- ▶ 남북 전략적 불균형 해소, 北 감질 억제, 국민불안 해소
- ▶ 남북 핵군비통제 협상 촉발
- ▶ 미 반확산정책과 불상충 = 한미동맹 강화
- ▶ 대중 전략적 위상 강화
- ▶ 역내 전략 균형 = Freedom Alliance 기반 구축

2017 전술핵재배치 촉구단 방미

<핵무장 국민결의대회>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발제 4

탈원전이 국정 문란인 이유

■ 이 병 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탈원전이 국정 문란인 이유’ 요약

원자력발전소는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발전소는 가압수형(加壓水型 Pressurized Water Reactor)과 비등수형(沸騰水型 Boiling Water Reactor)입니다.

한국형원전은 가압수형이고 후쿠시마 원전과 체르노빌 원전은 비등수형입니다.

원전에는 격납용기라는 시설이 있는데, 원전 사고 시 방사능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이 격납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면 원전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환경파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격납용기는 원자폭탄과 내부 수소 폭발에 의해서만 망가집니다. 측정가능한 지진인 규모 10 이상의 지진과 비행기 추락 혹은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한국형원전을 비롯한 가압수형 원전은 사고 시에 사고 진행 과정에 따라 수소가 발생하자 않거나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60년 동안, 현재는 300여기의 가압수형 원전이 운전되고 있는데 사고는 딱 한번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에서 났는데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고 암 발생 증가율이 “0”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쌀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세계 최고인 한국형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 없어질 것이며 원전 건설의 인프라가 붕괴되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물론 우량 공기업이 적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끝>

[Killing Nuclear Power Plants is a Serious Disturbance in State Affairs]

Byung-ryong Lee
Member,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re are different types nuclear power reactors. The most common types are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and BWR (Boiling Water Reactor). KSNP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s) is PWR whereas Fukushima and Chernobyl reactors were BWRs. All Nuclear Power Plants have reactor containment system which prevents the leak of radiation to outside. Put differently, as long as this containment system functions well, no accident will occur and no harm to humanity or nature. Even an airplane crash, missile attack or earthquake over magnitude 10 can not destroy the containment dom. It can be destroyed only by the internal hydrogen explosion or the external atomic explosion.

Even in case of an accident, KSNPs and PWRs do not produce oxygen or hydrogen, making hydrogen explosion impossibl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during the past 60 years, there has been only 1 incident among some 300 PWRs in the world, which happened in 1979 at Three Mile island plants in the U.S. but causing no injury or death. Also, neither did it harm the environment nor created cancer.

Really, KSNP, safe and cost-efficient, take pride in its top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The Moon government's decision not to build KSNP any more must be either inapprehensible or nuts. If it does so, South Korea's state-of-the-art nuclear energy technologies together with their infrastructure will die out, Korean citizens will have to pay more for electricity, and the state-owned energy enterprises will face high-deficit and debt. Most of all, energy-poor South Korea will confront serious energy security problems.

탈원전이 국정문란인 이유

이 병 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국형원전(가압수형 원전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의 안전성

한국에서는 절대로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확률이 극히 낮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전도 사람이 만든 물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세 번의 원전 사고는 모두 핵연료가 녹은(meltdown) 중대사고였습니다. 그런데 舊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방사능이 대기로 방출되어 사람이 죽고 환경이 파괴되었는데, 미국 쓰리마일 아일랜드(TMI) 사고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한 명도 없고 환경오염도 없었습니다. 우연이거나 사고 관리를 잘 해서가 아니라 명칭이 같은 원자력발전소이지 노형(盧型)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발전소는 가압수형(加壓水型 Pressurized Water Reactor)과 비등수형(沸騰水型 Boiling Water Reactor)입니다. 한국형원전과 미국 TMI 원전은 가압수형이고 후쿠시마 원전과 체르노빌 원전은 비등수형입니다.

원전에는 격납용라는 시설이 있는데, 원전 사고 시 방사능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이 격납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면 원전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환경파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격납용기는 원자폭탄과 내부 수소 폭발에 의해서만 망가집니다. 측정가능한 지진인 규모 10이상의 지진과 비행기 추락 혹은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습니다.

역사상 발생한 세 번의 원전 사고에서 두 개의 비등형 원전에서는 수소 폭발로 격납용기가 파괴되어 방사능이 누출되었으나 가압형 원전인 TMI에서는 수소를 연소 시키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해도 수소와 결합하여 물(H₂O)이 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론적 연구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가압수형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다면, TMI 사고와 유사한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환경이 파괴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과 같은 피해는 기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2011년 후쿠시마에 한국형 원전이 있었다면 사고 나지 않았습니

탈 원전 정책의 해악성

한국형 원전 기술은 지난 60년간 진보,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국가가 키워온 민족의 기술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기술을 상용화하여 한국형 원전을 설계하였고 국내에 짓는 모든 원전은 물론 UAE에 4기를 수출까지 하였습니다. 이 때 우리와 경쟁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과 프랑스였습니다. 그 후 한국형원전의 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져 공급가가 다른 나라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블룸버그(Bloomberg New Energy Finance Estimate(2018), Saudi Arabia Project)에 떠있는 원전 수출 4개국이 사우디에 제출한 견적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 \$11,638/kw

프랑스 : \$7,809

중국 : \$4,364/kw

한국 : \$3,717/kw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취소해주면 세계의 원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탈 원전을 계속 하면 원전기술이 완전히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원전을 개발했고 세계를 호령하던 웨스팅하우스도 자기 나라에서 수요가 없어지니까 간단히 망해버렸습니다. 일본 도시바에 팔렸다가 도시바마저 어렵게 만들어 결국 국제 천덕꾸러기가 되어 지금은 캐나다의 어떤 투자회사에 팔려 다음 주인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국력의 막강함은 물론 원전 기술 역사에서 리더였던 미국도 이랬는데 거기서 기술을 배운 극동의 조그만 나라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원자력 전문가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 교육의 쌍벽을 이루어온 서울대학교와 KAIST 원자력과는 학생이 오질 않고 와도 다른 과로 전과할 목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 할 일이 없는데 누가 원자력을 공부하려하겠습니까.

인공태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핵융합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우선 연료가 석유나 우라늄 같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바닷물이란 사실입니다. 핵융합을 하는 원소가 수소 이다보니 그냥 물(H₂O)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 1리터가 석유 300리터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분열 발전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방사능이 사실상 안 나옵니다. 이 기술이 상업화가 되면 인류는 에너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공태양, 꿈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핵융합 반응은 썩어 일억 도 이상이 되어야 일어납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EU, 인도, 중국, 한국 7개국이 프랑스에 핵융합 실험로(ITER)를 건설 중인데 일억 도까지 올릴 기술이 없어 사실 속으로는 초조하고 허망해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금년(2019) 2월 13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일억 도를 만드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꼴찌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돈도 제일 조금 내지만 기술은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부러워하는 몇 안 되는 한국의 기술입니다. 탈원전

이 계속되면 이 기술도 큰 타격을 받거나 소멸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전기값 인상, 미세먼지 증가 등 환경 파괴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전기가 없어지는 것이다. 화석 연료가 사실상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술의존이 강한 원자력 발전이 없어지면, 국제관계가 어찌어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비극입니다. 태양광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발전 수단에 불과하다.

탈원전의 이유 미스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불과 한 달 뒤인 2017년 6월 19일 탈 원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의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의 피해로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사망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와 ‘1,368명 사망’ 모두 가짜 지식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원전 사고란 핵연료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 핵연료가 과열되어 녹고(meltdown) 수소가 나와 폭발하는 것이지 지진에 의한 물리력이 원인이 아닙니다. 실제 후쿠시마에서 역사상 최대, 최악의 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5분부터 쓰나미가 몰려와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기까지 50분 동안 원전은 소소한 고장이 난거 같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원전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직접 증거입니다. 후쿠시마에 규모 9.0의 지진과 15m의 쓰나미가 닥쳤지만, 비상발전기가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거나 방수 처리 되어 있어 침수되지 않았으면 사고 나지 않았습다.

또한 1,368명 사망은 방사능 때문이 아닙니다. 사고가 난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까지도 약 9만 9천 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 피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방사능 과다 피폭인 경우는 2016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이 나왔는데 2016년 이후에 발병하여 2018년에 죽은 방사능 추정사 한 명뿐이라고 일본 정부와 UN산하 방사선영향 과학조사위원회(UNSCEAR)가 발표했습니다. (주간동아 인용 도쿄(東京)신문 2017.3.6).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이 1,368명이라고 인용한 수치가 잘못되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가짜 뉴스와 가짜 지식을 근거로, 60년간 키워온 세계 최고의 기술을 사실상 없애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멀쩡한 원전 영구 정지 처분

또한 문 대통령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령(船齡)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 틀린 사실을 억지추향으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고리 1호기의 선령이 40년이 다 되어가니까 이 기회에 세월호라는 조커를 한 번 더 거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1971년부터 상업 운전 했으니 사고 난 2011년까지 만 40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어 일어났습니다. 수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

다. 1979년 3월 28일 사고가 난 TMI 원전은 1년도 채 안 된 새 원전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은 40년 된 원전을 60년으로 수명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80년으로 하는 경향이 강력합니다. 10여년 전부터 “원전을 60년 쓰고 버리는 것은 낭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80년 연장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터키 포인트(Turkey Point) 원전은 1972년에 완공되어 2012년까지가 40년 설계수명 이였습니다. 이것이 60년으로 연장되어 2032년에 폐쇄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너무나 멀쩡하여 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터키 포인트 측은 작년(2018년 1월)에 20년을 더 연장하여 2052년까지 쓰게 해 달라고 NRC에 80년 수명연장 신청을 하였고 신청을 받은 NRC는, 세계 최초의 80년 수명 연장인데도 망설임 없이 초스피드로 리뷰를 진행하여 곧 최종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터키 포인트 원전뿐만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피치 보텀(Peach Bottom) 원전과 버지니아 주의 서리(Surry)원전 등 미국의 원전 대부분이 80년 수명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 미국이지만 이렇게 알뜰하게 합니다. 아니 알뜰하게 하니까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40년 됐다고 멀쩡한 원전을 싹둑 없애버리지를 않나(고리 1호기) 세금 7천억 들여 새것 같이 만들어 잘 돌아가는 원전(월성 1호기)을 수명이 끝나기도 전에 없애버리는 엄청난 낭비를 저질렀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배임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여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한국은 돈이 많으니 방위비를 5배나 더 내라고 으박지르는 것입니다. 하긴 한국은 2조 6천억 원짜리 신고리 5,6호기를 버리느냐 마느냐를 비 전문가들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나라이니 돈이 엄청 많은 나라인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미국의 원전 수명 80년 연장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미국의 환경 운동가들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같았으면 별별 가짜지식으로 유명해진 환경운동가들이 생난리를 쳤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양심 있는 환경운동가라면, 탈원전을 반대해야 합니다. 한국형원전은 안전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전혀 내뿜지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끝>

<해무장 국민결의대회>

해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국민결의문(안)

해무장 자유동맹 촉구 및 탈원전 폐기를 위한 국민결의문

■ 김태우, 신원식, 이병령, 조갑제 외

■ 김동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제홍보팀장

핵무장과 탈원전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 결의문 (안)

북한의 핵보유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북한이 완전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북한이 그와 같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만하고 핵무력을 고수할 것이 자명하다. 현재 북한은 최대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매년 10개 내외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다. 북한은 주요 투발수단인 미사일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오늘날 단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대륙간탄도탄과 잠수함발사탄도탄까지 보유한 미사일 강대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우리 군의 규모와 역량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적성 내용으로 가득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경제·환경·안보 차원에서 소중한 자산인 원자력산업을 죽이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안전과 번영의 토대인 한미동맹과 한·일·미 안보공조 체제를 허물면서 친북·친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자위적 핵무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모임’ 일동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화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성원해온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거짓 평화공세를 비핵화, 민족, 평화 등으로 포장하면서 우리 국민이 북핵의 인질로 전락하고 있는 사태를 방관해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것이 문 대통령이 거론해온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위한 행보였다면 국민 앞에 사실을 실토하고 사죄한 후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둘, 문재인 정부가 정녕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북핵 위협에 대한 중장기 안보대책을 강구하고 즉시 핵무장을 위한 제반 준비에 착수하라. 한반도의 핵 비대칭 상태를 종식시키고 핵균형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유엔헌장 제51조가 정한 자위권에 해당함을 전세계에 선포하라.

셋, 국적불명·정체불명의 탈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 원자력은 발전단가가 낮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소중한 에너지원이자 안보차원에서도 미래의 잠재력이다. 원자력을 폐쇄하고 한국형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부가 할 수 있

는 일이 아니다. 즉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라.

이와 함께 ‘자위적 핵무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모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강과 동맹’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이 헌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힘을 통해 이를 규탄하고 내칠 것을 확고히 결의한다.

둘,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 신냉전의 구도 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주목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기본전략은 핵균형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날로 거세지는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함께 핵을 보유하여 ‘핵보유 자유동맹’을 결성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에도 유의한다. 이에 우리는 핵균형을 위해 미 전술핵 재반입, 독자적 핵무장, 핵무장 자유동맹 결성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나가야 함을 확인하며, 우리는 이러한 안보과업을 거부하는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단죄할 것이며 국민의 힘을 통해 이 안보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정부를 선출할 것을 확고히 결의한다.

셋,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60년에 달하는 설계수명을 가진 한국형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반역적·매국적 결정이다. 우리는 7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월성 1호기에 서린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과 열정을 지우기 위한 좌파들의 술책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궤변을 앞세우고 국적불명·정체불명의 탈원전 정책을 파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파기할 것을 확고히 결의한다.

2020년 1월 17일

자위적 핵무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선진통일전국연합, 자유대연합, 나라지킴이교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연합 13개 단체,
Great Korea,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북한전략연구센터)

Citizens' Resolution

Calling for Nuclear Armed South Korea and Withdrawal of the Decision to Kill the Nation's Nuclear Power Industry

Pyongyang's nuclear ambition has already crossed the point of no return. Pyongyang is not likely to agree on a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 Even if it does agree so, the Communist regime will never fail to violate it and continue to pursue a nuclear weapon state status. Currently, North Korea is the world's ninth nuclear weapon state with up to 60 nuclear weapons and capability to produce about 10 nuclear warheads annually. North Korea has put tremendous effort also to develop delivery vehicles, making itself a formidable missile power with the gamut of missiles in hands including ICBMs and SLBMs.

Unfortunately, howev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reverse driving such as the ill-timed downsizing of ROK armed forces, signing in 2018 of the treasonous Sept. 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that made South Korea much more vulnerable to the North's surprise attack, and the decision to dismantle the nuclear power industry that constitutes the nation's valuable asset not only in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but in security and defense front, thus violating its dutie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In the areas of foreign affairs, the Moon government still hangs on pro-North Korea and pro-China policy lines, undermining the ROK-U.S. alliance and the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structure that has provided this nation with security and prosperity,

With this being the case, we at the Citizens Calling for Nuclear Armed South Korea and Withdrawal of the Decision to Kill the Nations' Nuclear Power Industry strongly condem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r misleading its people with fake peace and for doing nothing against the North's nuclear threat. So we urge as follows:

First, the Moon government must apologize to the people that it has deceived people with scheming words such as 'denuclearization,' 'blood-relations,' 'peace,' etc., and let the nation taken a hostage by the North's nuclear blackmail. If the Moon has done so because it seeks so-called "low-level federation unification," then it must confess it to the public and

wait for the historical and legal judgement.

Second, if Moon Jae-in administration wants to prove itself working for its people, it must come up with short and long-term security solutions to protect the nation and people from the North's nuclear threat, and should make a start immediately for nuclear armament for self-defense.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declare that South Korea will no longer tolerate the inter-Korean nuclear asymmetry and announce that Sou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belongs to the self-defense right stipulated in the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ir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discard immediately the freaky decision to phase out the nation's nuclear power plants. We do not know who initiated the mysterious decision and who or what country are targeted beneficiaries. For South Korea, atomic power has been cheap and clean energy not emitting greenhouse gases, and valuable future potential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e decision to shut down nuclear power plants and stop building the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s is not what a sane government can make. The Moon government should scrap the decision right away and switch to a policy bolstering the nuclear power industry.

In addition, we, along with all other South Koreans who love the nation, resolve as follows:

First, pursuant to the stipulations in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rotect the nation and its people through both independent and alliance capabilities. We firmly resolve that we will not recognize any government that turns a blind eye to this constitutional obligation as our government and that we will condemn and throw it away through the power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econd, taking note of impossibility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development of the neo-Cold War international order under which China and Russia connive at or virtually support the Pyongyang's nuclear arming, we confirm and reconfirm that nuclear parity must be the only and best way to safeguard peace and stability from the North's nuclear might.

We also take note that some day the U.S. and its Asian allies may need a “nuclear-armed freedom alliance” in order to check increasingly threatening Chinese expansionism and its strategic collaboration with nuclear-armed allies, Russia and North Korea. Therefore, we confirm that South Korea needs governments that pursues nuclear capabilities to meet all possible circumstances requiring redeployment of the U.S. tactical nukes, independent nuclearization to achieve a nuclear parity on the peninsula, or formation of a nuclear-armed freedom alliance for a regional strategic balance. Any South Korean government refusing this security task will be subject to our condemnation.

Third, it was a traitorous decision to stop building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s (KNSPs) renowned for highest standards, the cheapest price and 60-year long life-cycle. Particularly, the recent government decision to dismantle Wolsung-1 reactor for which the previous government spent 700 billion won to extend its lifespan for another 20 years must be a dirty ploy to erase legacy of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who initiated construction of the nation’s first heavy-water reactor with so many patriotic thoughts and passion. Any way, we now strongly resolve that we with the power given by the Constitution will stop the Moon government if it continues, under some sophistries nobody understands, killing of the nuclear power industry policy.

Jan. 17, 2020

Citizens Calling for Nuclear Armed South Korea and Withdrawal of the Decision to Kill the Nations’ Nuclear Power Industry

(Korean Retired Generals and Admirals Defending the Nation (KORGAD),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The Greater Korea United, The Grand Federation of Freedom Korea,
 Alliance of Korean High School Alumni for National Security,
 Alliance of Patriotic Veteran Officers of KOREA 13 organizations, Great Korea,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 North Korea Strategy Center,
 Committee for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연구회,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대연합, 전군구국동지회연합 소속 13개단체, Great Korea**

2020. 1. 17.